

효자동 황방산 3차 유해발굴 조사 시작

전주시·전주대,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3차 유해발굴 개토제' 거행·발굴조사 재개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잠든 황방산에 대한 유해 발굴이 재개된다. 전주시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2일 유해발굴조사단인 전주대학교 박물관 조사팀과 성흥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3차 유해발굴 개토제'를 열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조사 및 전수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발굴조사를 통해 효자동 황방산 일원에서 유해 78여구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효자동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개재, 완산동 강당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자동 황방산에서만 유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추가 발굴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오는 7월까지 효자동 황방산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감식 및 유품 정리를 거쳐 세종추모의 집에 유해를 안치할 예정이다. 발굴조사를 맡은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실장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향후에도 희생자의 해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과거사 정리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해 발굴 및 유해 안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와 전주대학교는 12일 유해발굴조사단인 전주대학교 박물관 조사팀과 성흥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3차 유해발굴 개토제'를 열었다.

“불나면 대피 먼저 하세요”

덕진소방서, 인식체계 확립 위해 홍보 나서

화재 발생 시 늦어지는 대피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란 슬로건을 내걸고 인식체계 확립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전북지역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원인으로는 대부분 자체 진화 또는 화재 현장 물건반출 등에 의한 피난 지연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불나면 대피 먼저'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월 13일에는 덕진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당시 주택 내부에 있던 2명이 자체 화재 진화에 나선 후 대피를 시도했지만, 화재 확산으로 인해 대피에 실패한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경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급격한 확산에 의한 피해가 커진다. 이에 덕진소방서는 자체 진화보다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홍보를 띄운 것이다. 덕진소방서는 화재사망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의 노

인으로 덕진구 내 고령층 거주 이·통장협의회 등에 노인 계층 등에 대한 '화재 시 신속한 대피 우선'의 계도를 펼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지난달 말 여의동 내 이·통장 협의회에 참석해 이·통장단을 대상으로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과 대피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피 우선 인식의 정착을 위해 관할 주민에게 다시 전달해 주기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등을 이용한 화재 진화도 중요하지만, 진화에 앞서 소화기 사용 지속 시간이 고작 10초~12초에 불과하다는 것과 화재진화에는 큰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지해 진화작업보다는 대피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대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피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화재 시 반드시 대피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82개 사업장 중 44곳서 56건 위반행위 적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첨단장비를 동원해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2개를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고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그 결과로는 44개 사업장에서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동추적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기동성 높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총 56건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20건(35.7%),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17건(30.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9건(34%)이다. 주요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된 2건, 방

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1건은 조업정지 10일과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1건과 미신고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원 이하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15건과 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3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별 사용증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점에 조치를 요청하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업장 위반사례 최소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 컨설팅, 주요 위반 사례 집 배포, 관련 법령 교육강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과 이동추적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7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 추진

토지 경계분쟁 해소·지적불부합지 정리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산구 동안산2지구 등 7개 지구 3159필지(167만4628㎡)를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는 동안산2지구, 동서현1지구, 대성1지구 등 안산구 3개 지구와 금암2지구, 팔복1·2지구, 호성예곡4지구 등 덕진구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적재조사측량비 8억2600만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웃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덕진경찰서, 카카오톡 채널에 '상담 챗봇' 개설

요즘 온라인 공간 익명성 SNS활성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 필요성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친밀성을 겸비한 '덕진경찰과 챗봇(챗GPT)'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 약자 보호 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 오픈채팅방의 상담 챗봇을 개설했다. 플랫폼에는 '성범죄 상담 챗봇, 사전 등록신청, 학교폭력 신고, 여성피해 지원, 전화상담, 경찰홍보' 등 6개의 채널 메뉴를 구축했으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고소사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챗봇도 같이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덕진경찰과 챗봇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신고 상담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통한 안전한 전주를 만들어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특별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주택 전기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4남매 숨진 가운데 화재가 멀티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전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사용 안전수칙을 알렸다. 전기 화재의 주요 발생 요인으로는 '먼지, 습기' 등이 쌓여 누설전류와 전기 불꽃이 반복적으로 발생, 절연체 표면을 탄화시키는 트래킹 현상과 전로에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과부하, 전기기구의 노화 등으로 인한 전선

파손에 따른 합선 및 단락 등이 있다.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 내 먼지 주기적으로 청소 △콘센트 주변 습기 주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 사용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 확인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전선 피복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정기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의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